광주 남구 '살롱 드 사직' 속속 준공…개관은 '차일피일'

올초 완공 청년살롱 최근 운영자 공고

갤러리살롱 등도 3주 넘게 공간 방치

區 "하반기 중 운영자 모집 마무리"

광주 남구가 사직동 일대를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의 공간 리모델링이 마무리됐음에도 운영자 미선정 등으로 개관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1월 리모델링이 끝난 청년살롱. /주성학 기자

광주 남구가 사직동 일대를 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의 공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운영 준비 미흡 등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는 사직동 일원에 조성되는 시간우체국 주변 유휴 공간 6곳을 리모델링해 테마형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체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국·시·구비 등 총 45억3천400만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테마형 문화공간은 ▲통기타·국악살롱 ▲청년살롱 ▲아날로그사진관 ▲수장고·기념품판매장 ▲갤러리살롱 ▲녹성상회 등 6개소다.

이 중 통기타·국악살롱은 지난 5월 말 문을 열었으나, 청년살롱은 준공 6개월여가 지난 이달 3일 운영자 공고에 들어갔다. 모집 마감은 오는 28일이다.

아날로그사진관과 수장고·기념품판매장, 갤러리살롱 리모델링도 지난달 20일 준공됐지만, 위탁자 공모가 이뤄지지 않아 개관 시점은 불투명하다.

녹성상회는 이달까지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오는 8월부터 본격 조성에 들어가 2026년 3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직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무상 사용 형식으로 운영을 맡는다.

남구는 살롱별 위탁자 선정과 관련 공모 일정 등을 내부 검토를 거쳐 유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각 살롱의 공간 조성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일부 살롱은 위탁자 선정 절차 미진행으로 공간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또한 위탁자 선정 이후에도 운영자의 내부 시설 정비 등 준비 절차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돼 개관 시점이 수개월씩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기타·국악살롱은 지난 3월 운영자가 선정된 후 약 2개월 뒤 개관했다.

이에 대해 한 남구의원은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심사 비용 등 행정 예산과 동시 개관의 시너지를 생각하면 일정이 다소 늦춰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간 조성 후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위탁자 선정이 지연될 시 각 공간이 제각각 운영돼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행정적 지원과 홍보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별 전문성을 띤 위탁자를 모집 중이며, 시간우체국과 연계된 아날로그사진관, 수장고, 기념품 판매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통합 운영하고 나머지 공간은 개별 위탁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각 공간의 특성과 활용 목적에 맞춰 순차적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 중이다 보니 일부 공간은 개관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하반기 중 운영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살롱 간 협업 체계를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광주TP, '징역형' 성비위 직원 감사실 배치 적발

市 감사위, 직원 징계 등 권고

여성가족복지시설 감사서도

동·서·남·광산구 위반 '무더기'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가 직원의 성비위 제보를 받고도 묵살한 채 방치한 것은 물론, 당사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감사 업무를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4-21일 진행한 '2025년 광주TP 종합감사' 결과, 성 비위 직원 인사 관리 부적정 등 10건을 적발했다.

광주TP는 지난 2022년 12월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직원 A씨가 성폭력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당연면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A씨를 감사 담당자로 배치하기까지 했다.

A씨는 뒤늦게 면직 처리됐으나 약 9개월간 연봉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직원 징계와 기관장 경고 처분이 권고됐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5일부터 3월12일까지 실시한 '여성가족복지시설·보조금 감사'에서도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 대상 기간과 사항은 지난 2022-2024년 시설 운영 및 업무 전반으로, 광주 동·서·남·광산구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로 11건이었다. 그 뒤는 서구 8건, 동구 4건, 광산구 3건 순이었으며 북구는 올해 감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 주요 적발 사항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평가 목적과 무관한 국외연수·워크숍을 다녀온 5명에게 여비와 참가비 명목으로 620여만원을 집행한 것 등이었다.

서구와 동구는 관할 복지시설에서 세입 결산 보고서에 후원금 내역을 누락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했음에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각 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변은진·안재영 기자

"학살자 전두환 찬양한 '리박스쿨' 처벌해야"

오월 단체·기관 성명

극우 성향의 역사관을 초등학생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리박스쿨'에 대해 오월단체와 기관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3일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학살자 전두환을 찬양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리박스쿨은 명백한 '교육 내란'이다"며 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 전두환 기념물 설치 금지 등을 담은 '전두환 잔재청산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이 있었음에도 법안 심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 관계자 처벌 ▲국가폭력 피해자 예우 강화 ▲전두환 잔재청산법 조속 처리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리박스쿨 추천 인사 공개 및 책임 조치 ▲역사 왜곡 인물의 교육계 배제 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극우적 역사관 주입 시도와 역사 왜곡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말뿐이었던 교육부, 정당, 국회, 정부 등은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경찰, 오늘부터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주 2회 일제 단속…밤낮 수시도 병행

광주·전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13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 기간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하며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안재영 기자

금타 노조 "해외공장 신설 안돼…국내 이전을"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 현실적" 주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들이 사측의 해외공장 신설 계획에 반대하며 국내 이전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해외공장은 자금 확보, 생산량, 노동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국내, 특히 함평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서 국내 공장은 축소하면서도 해외공장 신설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주주인 중국 자본 더블스타는 국내 생산기반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해외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고 경영진도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데 이는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평 빛그린산단으로의 공장 이전 ▲광주 1공장 재가동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노조는 "2천500여 조합원과 2만여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향토기업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자세로 국내 생산 기반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주성학 기자